

중국의 핵실험 배경과 전망



중국은 탈냉전 시기에 효과적인 국가안보를 위한 군사상 비장의 카드로 값싸고, 손쉬운 핵병기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핵전력의 강화를 통한 지역 대국으로서의 국가적 위신을 보존하고자 하려는 것 같다. 또한 중국이 국제여론에 역행하는 핵실험을 강행하는 것은 중국이 핵실험 이슈를 대외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정치적 카드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와 관련 있어 보인다

李 弘 杓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정치학 박사

중국 은 지난 6월 8일 신강 위그르 자치 구에서 또 핵실험을 단행하였다. 지난 64년 10월 첫번째 원폭실험에 성공한 이래 43번째의 실험이다.

냉전종식 이후 국제여론이 핵확산 금지를 지지하고 있고, 특히 최근 들어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의 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매우 활발히 전개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이번 핵실험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중국은 핵실험 직후 외교부의 성명을 통해 「이번 핵실험은 순전히 자위 목적의 제한적인 것이고, 중국이 핵실험 전면금지 조약의 교섭에 참가하고 있으며, 동조약의 발효 후에는 핵실험을 중지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바꾸어 말해 CTBT 조약이 발효되기까지는 중국이 핵실험을 계속하겠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올해 안에

두차례의 추가 실험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은 이제까지 핵보유국가로서 최소한 핵역지전략을 추구해 오고 있다. 이 전략은 냉전 시기에 구체화된 것으로 중국의 주적국인 미국과 구소련의 핵공격에 대한 역지력의 확보를 요체로 하고 있다.

즉, 중국이 미국이나 구소련으로부터 핵공격을 당하면, 상대국의 정치, 경제의 중추지역에 대해, 즉각 반격을 가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중국에의 핵공격 또는 핵으로의 위협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에 따라 중국은 70년대 초에 사정거리 1만3천킬로에 달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의 실험에 성공한 것을 시작으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의 배치 등으로 핵전력을 강화하고, 80년대 중반까지, 미소를 중심으로 하는 상호 핵억지체제의 틀속에서 최소

한 억지전략체제를 구축하였다.

냉전의 종식 이후 핵무기를 둘러싼 국제환경은, 한편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이나 러시아의 핵물질 유출이라는 핵확산에 대한 위기가 존재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과 러시아 간에 제2차 전략무기 폐기협정(START II)과 같은 핵군축이 진전되고, 핵확산방지조약(NPT)체제를 지키려는 국제적 노력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처럼 냉전시대에 구축되었던 핵억지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 하에서 중국은 왜 국제적 비난을 무릅쓰고 핵실험을 강행하고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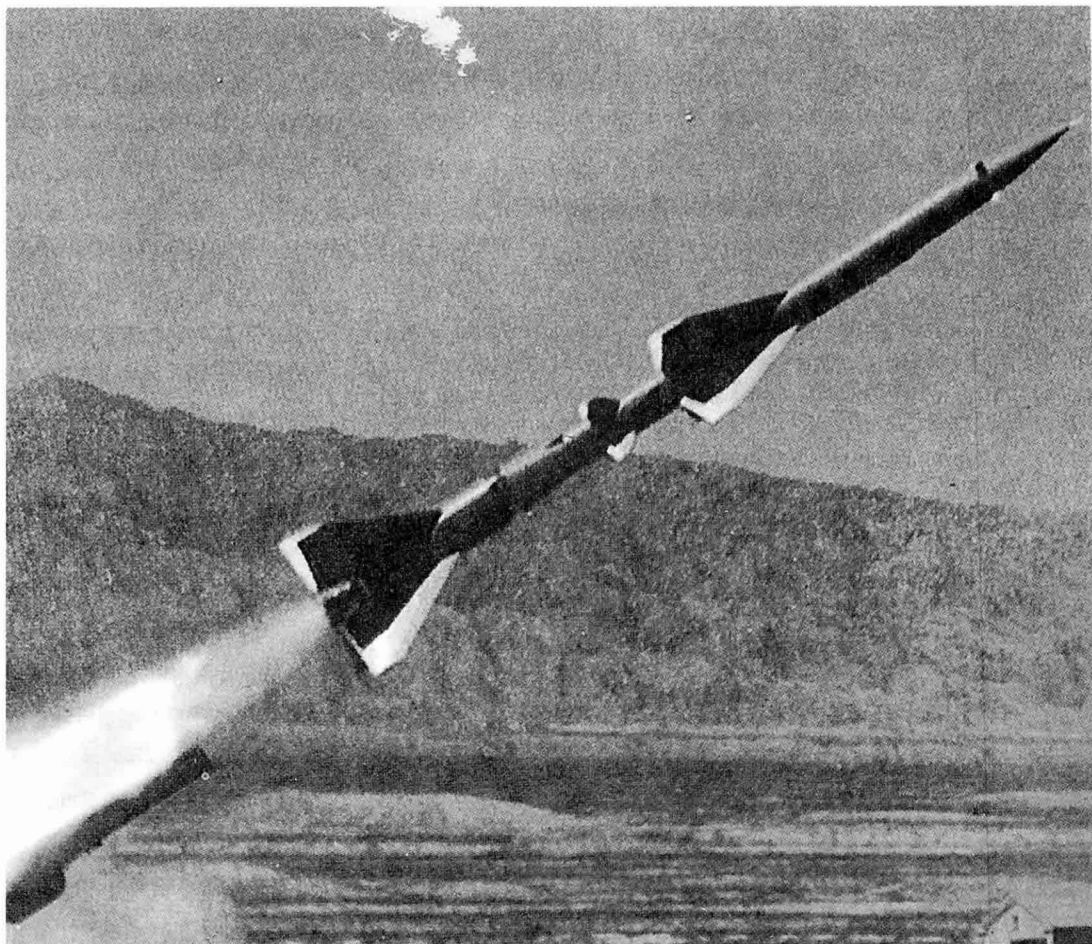
배 경

이러한 물음에 대한 첫번째 대답은 중국의 신 국방정책과 관련이 있다. 중국은 주지하는 대로 80년대 말부터 지역의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처한다는 이유로 군사비를 큰 폭으로 늘리면서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해오고 있다.

특히 중국은 91년 걸프전쟁이 탈냉전 시기의 새로운 전쟁 양상임을 깨닫고 지난 수년간 국방 현대화의 초점을 병기의 하이테크화에 맞추어 오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자금력과 기술수준 및 89년 이

중국의 핵전력 강화노선은 역내의 군비경쟁을 더욱 가속화시켜, 지역의 안보환경을 크게 악화시키는 한편, 지역 내에서 중국 위협론을 확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사진은 핵탄제가 가능한 중국의 CSS-3 ICBM)



후 미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중국이 단기간 내에 이러한 부문에서 큰 진전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중국은 비용 대 효과 측면에서 첨단무기의 확충보다 훨씬 유리한 핵병기로 군사력을 보강코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즉 중국은 탈냉전 시기에 효과적인 국가안보를 위한 군사상 비장의 카드로 값싸고, 손쉬운 핵병기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이러한 핵전력의 강화를 통한 지역 대국으로서의 국가적 위신을 보존하고자 하려는 것 같다.

또한 중국이 국제여론에 역행하는 핵실험을 강행하는 것은 중국이 핵실험 이슈를 대외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정치적 카드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중국은 주지하는대로 70년대말부터 경제건설을 국가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미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해 오고 있다. 그러나 천안문 사태 이후 중국과 미국 관계는 냉각 상태를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자국에 대한 미국측의 다양한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예로, 중국의 미사일 기술 이전에 관련한 제재 움직임, 최혜국대우조치(MFN)의 갱신을 둘러싼 중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비난 공세와 중국의 국제무역기구(WTO)가입과 관련한 미국의 비협조적 자세 등을 꼽을 수 있다.

중국은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을 냉전 이후 중국에 대한 새로운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어, 미국을 패권주의 국가로 경계하면서 상기한 미국의 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치적 카드로 핵실험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은 소련의 해체 이후 독립국가연합(CIS)에 의한 핵물질의 해외유출 방지 및 북한의 핵개발 중지 등 핵확산 방지조약(NPT)체제를 지키는 것이 냉전이 종식된 이후 지구상에서 유일한 초강대국 지위를 갖게된 미국의 새로운 과제라고 여기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지구상의 5대 핵강국의 하나이며, 북한과 특수관계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국의 협력이 매우 긴요함을 느끼고 있다.

바로 이점에서 중국이 냉전의 종식 이후 잠재적 적성국가라고 인식하는 미국에 대해 핵전력 또는 핵실험을 정치적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구도가 성립된다.

냉전 시기에 핵무기는 군사력으로서 그 기능을 발휘하기 보다는 핵보유 국가간에 형성되었던 상호억지 관계 속에서 상대 국가에게 정치적 또는 심리적인 위협

중국은 91년 걸프 전쟁이 탈냉전 시기의 새로운 전쟁 양상임을 깨닫고 지난 수년간 국방 현대화의 초점을 병기의 하이테크 화에 맞추어 오고 있다 (사진은 최근 제3세계 수출의혹으로 관심을 모은 M-11 미사일)



요인으로 위력을 발휘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이, 「핵」을 다른 국가들에 대한 정치적 또는 심리적 카드로 사용할 소지가 존재한다.

특히 중국은 북한이 94년 NPT탈퇴를 선언하고 對美 교섭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핵카드가 미국측의 양보를 이끌어 내는데 커



다란 효과를 발휘했다고 인식하고 있어, 앞으로도 중국은 핵을 수단으로 삼아, 지역 내에서 전략적 주도권을 확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對美 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중국은 또한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해서, 지역의 안보환경을 자국에 유리하게 - 적어도 불리하지 않게 -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 보인다.

중국은 냉전의 종식 이후 지역 내에서 강대국 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과 자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은 크게 감소되었다고 느끼고 있으나, 지역 정세가 매우 불안정하고 유동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특히 미소대립의 종식은 지역의 긴장 관계를 이완시킴으로써, 이 지역에 잠재하고 있는 안보위협 요인이 소규모 분쟁의 형태로 분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은 대만통일, 남지나해에서의 영유권 문제 등 주변국들과 분쟁의 소지를 많이 가지고 있음을 증시하고 있다.

중국은 특히 대만의 분리독립 움직임과 관련

하여 무력해방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으나, 통상 군사력에 의한 대만의 해방은 대만의 지형조건이나 군사력 수준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이 점에서 중국은 핵실험을 계속하여 핵이 갖는 군사·정치적 힘에 의존하여 일거에 대만통일을 달성코자하는 의도도 갖고 있지 않나 의심이 된다.

같은 맥락에서 핵의 위력을 배경으로 남지나해에서의 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의 입장을 강화코자 하는 것도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 이렇듯 핵무기를 이용하여 주변국에 압력을 가하고자 하는 의도는 핵실험이 탄두의 소형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영국전략연구소의 한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은 현재 잠수함 발사 미사일 12기와 대륙간 탄도탄 및 중거리 미사일 70기를 보유 중이며, CTBT의 발효에 앞서 이들 미사일의 사거리와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소형 핵탄두의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중국의 핵실험은 새로운 미사일을 장착하는 소형탄두에 실험의 주목

중국은 핵을 수단으로 삼아 지역내에서 전략적 주도권을 확보하고 다른 한편으로 대미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사진은 수십년의 시간이 필요한 방사능 계측 작업)

적을 맞추고 있으며, 실제로 중국에서는 각종 탄도미사일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탄두 소형화가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등의 전략핵의 근대화에 관련하고 있을 가능성은 크고, 그것은 중국이 종래의 최소 핵억지전략을 넘는 새로운 기능을 핵에 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하는 추측을 가능케 하고 있다.

즉, 최근 중국 핵실험의 목적은 중국이 핵전력의 기능을 종래의 전략적 대미, 대러 핵억지에 국한시키기 보다는, 아시아 주변까지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전역, 전술적 역할에 까지 확충하고자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중국의 군비증강과 군현대화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될 것 같다. 왜냐하면, 중국은 지역의 유동적인 정세하에서 지역 내에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현안해결의 가능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강한 군사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으로도 중국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경제의 발전 속도에 따라 핵전력 강화 노력은 계속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지역의 안보환경에 미치는 영향

중국은 핵실험을 단행하면서 항상 핵보유국가중 중국의 실험횟수가 가장 적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해 오고 있다. 실제로 중국의 실험횟수는 여타 핵강국에 비하면 현저히 적은 편이다.

미국 원자과학자회보 최신호에 의하면, 미국과 구소련은 지금까지 모두 1030회, 715회의 실험을 각각 실시하였고, 프랑스도 210회 이상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실험횟수의 적음에 대한 주장은, 핵보유국 사이에서는 설득력을 가질

수 있으나, 비보유국에는 통하기가 어렵다.

특히, 중국이 구사하려는 핵카드는 냉전 후의 새로운 국제질서에 역행하는 것이 되어, 아시아 이웃나라에서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본이 중국에 대한 정부개발원조(ODA)를 고리로 삼아 중국의 핵실험 자체를 요구해 오고 있으며, 이번에 핵실험을 강력히 비난한 것이 이러한 상황을 잘 나타나 주고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냉전의 종식 이후 중국안보에 대한 위협은 현저히 감소하였다. 중국은 89년 구소련과 오랫동안 적대관계를 청산하여, 북방으로 부터의 안보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다.

중국은 미국과 일본을 향후 잠재적인 위협국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이들 국가들과의 높은 상호의존관계를 감안할 때 중국이 단시일 내에 이들 국가들과 전면적인 군사적 충돌에 직면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번 핵실험이 자위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 중국이 상정하는 자위란 어떤 위협에 대한 것인가? 이에 대하여 중국은 명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점은 중국이 냉전종식을 전후하여 공세적 방위정책을 추진하면서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향후 지역의 국가들로부터 중국의 군사적 의도에 관해 의심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핵전력 강화노선은 역내의 군비경쟁을 더욱 가속화시켜, 지역의 안보환경을 크게 악화시키는 한편, 지역 내에서 중국 위협론을 확산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이다. 그 결과 지역 내에 협력과 교류를 저해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궁극적으로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해칠 것이다.

맺는 말

냉전 이후 미·러에 의한 핵군축이 진행되는 추세 속에서 NPT체제를 존속시키는 것은 냉전 후 새로운 국제질서를 위한 중심적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이미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였고,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국가의 숫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로, 아시아 지역에서는 북한의 핵개발 의혹 문제를 중심으로 인도, 파키스탄 등 사실상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간주되는 국가가 존재하는 등 핵확산 문제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다.

또한 러시아 내부의 혼란으로 인해 핵물질의 관리가 허술해져 국외로의 유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확산의 위험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같은 국제환경하에서 중국만이 자위라는 명목하에 핵실험을 계속하여 자국의 안보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지역 국가들은 더 이상 용인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핵실험의 속행은 이것이 핵개발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주변의 몇몇 국가로 하여금 핵개발을 부추길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객관적인 기준으로 중국의 군사력은 현재 미국과 러시아 등에는 훨씬 뒤떨어져 있는 수준이나, 동아시아 주변국에는 커다란 잠재적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군사전략이 방어적인 것임을 누누히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내의 군비경쟁이 말해 주듯 중국의 방위정책은 지역의 다른 국가들에는 매우 위협적인 모습으로 투영되고 있다. 이 점은 특히 중국이 지역 내의 유일한 핵보유국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중국의 핵실험이 지역의 커다란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중국에게 인식시킬 수 있는 정책 노력이 향후 지역의 안정을 위해 매우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동북아 지역 안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중국이라는 점에서, 중국에 대한 위협감을 불식시키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이 점에서 중국 군사정책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지역 국가 간에 신뢰구축의 틀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핵실험이 지역의 커다란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중국에게 인식시킬 수 있는 정책 노력이 향후 지역의 안정을 위해 매우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사진은 CPMIEC 지대지 미사일)



끝으로, 타국의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가의 힘에 의존하여 자국의 안보와 이익을 쫓는 것이 국제정치의 냉엄한 현실임을 다시금 인식하는 것이 중국의 이번 핵실험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값진 교훈이 될 것이다. **防**